



보 도 자 료

제목 :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촉식 (2012. 7. 12.)

I. 개요

- 대법원은 2012. 7. 12.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하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함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08. 1. 1.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위원장(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법관, 검사, 변호사, 법률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됨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그 동안 축적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 분석 등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할 예정임

II.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설치 경위

- 2008. 1. 1.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형사사건¹⁾에 대하여 배심제와 참심제의 중간 형태인 1단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 오고 있음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당시 사법개혁위원회는 1단계 국민참여재판을 5년 동안 시행해 본 후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는 것을 건의함
- 대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존중하여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차인 2012년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1) 시행 초기에는 살인, 강도강간, 강도치사상, 강간치사상 등 형사합의사건 중에서도 일부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2. 7. 1.부터는 모든 형사합의사건(사형, 무기, 단기 징역 1년 이상 범죄)으로 확대됨



형태를 결정하기로 함

III.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설치 근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5조

▣ 다만, 구체적인 구성시기 및 최종 형태 결정시기 등에 관하여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5조 (국민사법참여위원회)

- ①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둔다.
- ②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IV.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구성

1. 국민사법참여위원회규칙

▣ 2012. 5. 29. 제정·공포(대법원규칙 제2405호)

제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 · 검사 ·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법률학 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인
-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2. 지역별 구성인원

- ▣ 위원장, 법관(2인), 검사(2인), 변호사(2인), 법륜학 교수(2인), 학식과 경헙이 있는 사람(4인) 총 13인으로 구성됨

위원장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경험 인사	합계
1	2	2	2	2	4	13


3.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직위 및 경력
위원장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관 위원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검사 위원	안창호	서울고등검찰청장
	백종수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
변호사 위원	오세빈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재)
	김덕현(여성)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현재)
법학교수 위원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현재)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현재), 한국언론법학회 회장(현재)
학식·경험자 위원	허남진	중앙일보 · JTBC 대기자
	조벽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국무총리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현재)
	김영미(여성)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본부장 한국여기자협회 회장(2008 - 2010)
	양현아(여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젠더법학회 회장(2009-2011),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현재)



V.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심의안건

1. 국민참여재판의 기본 형태

- ▣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1단계 국민참여재판은 최종 형태를 완성하기 전의 잠정적인 형태로서 대륙법계 참심제와 영미법계 배심제를 적절하게 혼합한 형태(준배심제 또는 준참심제)  사법개혁위원회는 참심제와 배심제 중 어느 하나를 따르지 않고 일단 양 제도를 혼합한 형태로 시행해 본 후 그 경과를 보아서 최종 형태를 결정하는 것을 건의함

▣ 대륙법계 참심제

- 일반시민(참심원)이 재판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재판방식임
- 이러한 참심제는 유럽 대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스웨덴이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
- 프랑스와 독일은 처음에는 영미법계 배심제를 도입하였다가, 고비용 등을 이유로 참심제로 전환한 국가들임
- 일본은 1928년부터 15년간 배심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시행을 중단하였고, 2009. 5. 21.부터 참심제의 일종인 재판원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영미법계 배심제


-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실문제(형사재판의 경우 유무죄 판단)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결과에 구속되어 재판하는 방식임
- 11세기경 영국에서 기원하였으며, 오늘날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스페인, 홍콩, 스리랑카 등 50여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음
- 러시아와 스페인은 1990년대에 배심제를 부활한 국가들임

▣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참심제와 배심제를 혼합

-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함 : 배심제적 요소
-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참심제적 요소
- 법관은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참심제적 요소 수정
-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를 함 : 참심제적 요소
- 배심원은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 개진할 수 있음 : 배심제적 요소
- 배심원의 평결은 법관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짐 : 배심제적 요소 수정

▣ 배심제의 경우 국민의 사법참여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고



비용, 배심원의 판단능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 특히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있음  참고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참심제의 경우 국민의 사법참여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배심제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있음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그 동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기본 형태를 배심제로 할 것인지, 참심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방식과 같은 제3의 형태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2. 기타

-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
 - 현재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음(신청주의)
 - 대상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실시하는 방안(강제주의)의 채택 여부가 논의될 수 있음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 제한 여부
 - 현재는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제한되지 않음
 - 최종 형태 결정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권 제한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음
- 그 밖에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권한, 배심원의 수, 다수결 평결의 허용, 배심원과 법관의 양형토의, 평의절차에서 법관의 의견진술 허용 여부 등이 논의될 수 있음